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규제인가, 성장 동력인가

최 석 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ichoi@cerik.re.kr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금년 1월 13일부로 제정되어 4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동법 시행령은 4월 13일에 제정 공포되어 저탄소 녹색 성장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준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규제와 성장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는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건설산업 영향 ‘예상보다 크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건설산업 자체가 소비하는 에너지량 때문이다. 물론 상품군별로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 대중교통 수단은 도

로보다는 철도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국토부의 국정 보고에서 2020년경에는 철도 분야 투자비가 도로 투자비를 역전하도록 계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국가 전체 에너지의 25%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이 부문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기존 건축물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억제시키는 새로운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저감을 위한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리라는 예상도 쉽게 할 수 있다.

관련 조항별로 살펴보면 우선, 법 제24조는 자원 순환의 촉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의 억제와 재활용 자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업과 기

술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있지만 건설 생산 과정에 있어서는 친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전통적인 토목과 건축 분야의 건설 현장은 앞으로 공사 수행 과정에서의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기술과 방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하겠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부 적용되고 있는 녹색 도로 인증 시스템의 경우 인증 항목의 과반 이상이 시공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제51조 ‘녹색 국토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녹색 인프라의 주요 대상과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탄소 중립 도시, 2)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과 보존, 3) 녹색 항만, 4) 친환경 교통 체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54조에서는 녹색 건축물의 확대라는 조항을 통해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원칙과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는 제42조 '녹색 건축물의 기준', 제43조 '녹색 건축물의 확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 시설물은 토목 시설과 같이 시공 과정에서의 친환경성도 중요하겠지만, 설계 과정에서의 각종 친환경적 기술과 요소의 도입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신축에는 설계 및 공사 기준에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이 적용되어 현재와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에너지 사용량이 많을수록 탄소 배출량이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쓴 값에 입주하더라도 유지 관리비는 엄청나게 늘어나 결과적으로 부담액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입주자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비용과 함께 탄소세에 해당되는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유지 관리비가 싼 쪽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기준·시스템 구축과 지자체의 역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

령의 실제적 실행을 위해서는 녹색 국토의 시설을 담당하는(주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됨) 개별 발주기관의 녹색 시설 기준의 마련과 이를 인증하는 민간 혹은 공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주로 녹색 건축물 중심이었던 관련 기준과 인증 체계가 녹색 도로, 항만, 공항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기준과 인증 체계는 이미 도입되었거나 시범 적용 중에 있다.

공공 발주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도 지자체의 책무 등을 통해 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와 그 이하 지자체의 녹색 정책이 더 실질적이고, 실제 시장과 산업을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 녹색 제도와 실제 프로젝트가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시설물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USGBC의 LEED Silver 이상의 친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다. 산타모니카시의 경우 주정부보다 더 강력한 녹색 건설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

한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국가 상위 정책과 제도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지자체 특성에 맞는 개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지자체는 정부의 권고보다 더 강력하게 녹색 정책과 유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이러한 활동은 건설기업의 관련 사업 투자 및 유치 활동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자체의 경우 개별 시설물보다는 지역, 블록 등을 패키지로 하여 진행하는 것이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매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녹색 경영'의 과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래의 설계와 시공의 생산 역할뿐만 아니라 녹색 기술, 자재 등 연관 업계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를 인수하거나 제휴하여 선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활동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기업의 녹색 경영과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 등의 조항과도 부합된다. 미국에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재활용 산업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재활용

자재산업의 성장은 녹색 시설물에서 재활용 자재 활용률을 70% 이상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친환경 건축물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재 재활용의 경우 연관 산업이 성숙되지 못한 관계로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선택의 문제는 지났다

마지막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그리고 이를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은 건설산업에서도 새로운 업역 혹은 시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이미 친환경 건축 인증과 관련된 용역업 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러 유형의 전문 영역이 지속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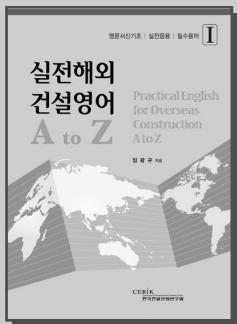
생겨날 것이다. 관련된 전문 영역이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전혀 반대가 없다. 하지만 국내 건설시장에서 턴키제나 BTL 사업 등에서 보았듯이 실제보다는 페이퍼 중심으로 대행해주는 기관의 난립은 막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 환경은 오히려 해당 영역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 업체의 성장을 막을 뿐만 아니라 페이퍼 녹색 건설산업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녹색 건설산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집단의 보다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녹색 건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미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많다. 논의되고

있는 녹색 건설의 상당수는 기존의 건설 활동에서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녹색 성장은 그동안 건설산업이 간과하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을 재조명하고 있다. 여기에 첨단 기술(친환경, 정보화 기술 등)을 포함시켜 궁극적으로 건설 시설물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뿐이다.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 정책은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선택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세간의 유행어처럼 건설 산업에서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즐긴다면 신성장의 길도 함께 열릴 것이라 믿는다. CERIK

신 · 간 · 안 · 내

실전해외건설영어 / 임광규 지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펴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건설 인력 양성을 통한 국제 건설시장 진출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총 5권의 「실전해외건설영어」 출간을 기획하고 이 중 제1권을 최근 발간하였다. 이번에 나온 「실전해외건설영어I」은 영문 서신 작성의 기초부터 해외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던 400여 건의 영문 서신 사례를 편집, 주석을 달았다. 또한,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용어 300개를 선별해 놓았다.